황교안 한국당 대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바른 공천하면 인재 모여…내년 총선 이길 것"

4월 3일 재보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

5·18은 민주화운동 역사적 평가 끝나

5·18 공청회 발언 윤리위 절차 밟고 있어

근대사 아픈 사건들 사회 통합 필요

영산강 보 등 철거 결정은 폭정

친박·친이는 구태…역량보고 당직 인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한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폭정" "실정" 등의 용어를 써가며 강하게 공격했다.

향후 대여 관계를 가늠해보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표가 돼 처음 치르는 선거여서 느끼는 중요도가 다를 것으로 생각됐다.

황 대표는 인터뷰 내내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어조로 질문에 답변했다. 하지만, 원론적인 답변이 많았고 또한 5·18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아쉬었다.

다음은 황 대표와 일문일답 요약.

- 오는 4월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등 경남지역 두 곳에서 실시된다. 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 의미가 있다. 지역에서 대응해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 당이 총체적 대응하려고 한다. 총력을 기울여서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또 여러 선거전략을 총 동원하겠다. 저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현지에 가 있으려고 한다. 방도 하나 얻었고 당협 사무실에 제가 있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다. 한국당이 총력을 기울이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후보단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등과 단일화 논의를 할 의향은 있나.

▲(당) 대표들간에 그런 협의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지역에서 같이 두 진영을 돕는 유권자들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운동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자유 우파가 하나되는 길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

- 내년 총선 승리 전략은, 인재 영입이 필요할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공천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국민에게 내놓는 것이다. 이 길이 좋은 분들을 모아올 수 있는 길이다. 누구든지 바른 공천을 하는 정당에 인재들이 모일 것이다.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에 대한 징계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언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또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여부와 5·18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인 평가가 끝났다. 이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다. 5·18과 관련된 공청회 관련 발언들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가급적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조치하겠다.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까지만 말 할 수 있다.

-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은.

▲제주도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제주 4·3사건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안들이 여러 건 있다.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등,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아픈 상처를 남긴 사건들인데 함께 보듬는 것이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과거사 전반에 대한 보상방안도 만들 필요가 있다. 행안위에서 과거사 정리법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처리가 되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10% 축소를 당론으로 내놨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해법은.

▲선거제 개편은 정치의 기본틀을 바꾸는 기본적인 문제다. 의석이 많다고 해서 일방 정당들이 모여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법에 관한 법안들이 여야간에 합의 없이 처리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을 뽑는 문제인데 일방적이라면 민주적이지 못하다.

저희는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논의를 했다. 그것은 오히려 의석수를 줄이라는 것이다. 또 내가 뽑은 사람이 의원으로 활동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비례대표가 내가 뽑은 국회의원은 아니지 않나.

- 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고 있는데 구체적인 투쟁 방안이 있나.

▲탈원전으로 제일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다. 탈원전이 국민 피해로 오기 시작했다. 1조 얼마짜리 기업(한전)이 1년만에 손해보는 적자기업이 됐다. 우리가 국민과 함께하면 언론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탈원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희들은 탈원전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탈원전 반대 서명 운동 벌이고 있는데 43만명이 서명했다. 정책 서명으로서는 유례가 많지 않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최근 금강 공주보와 영산강 보 등 철거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를 철거하면서 수자원이 고갈되는 상황 등을 고려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알리면 국민 저항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희는 입법 투쟁을 하려고 한다. 입법 투쟁을 위해서는 소위 의석수가 필요한데 통과되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최대한 하려고 한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실정을 넘어서 폭정이라고 얘기한다.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고 있다.

- 당직 인선 때 친박(친박근혜)계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저는 정치권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친박·친이 잘 모른다. 나는 누가 친박·친이 그러는 것이 구태다. 나는 (사람을) 역량으로 봤다. 그것에 따라서 역할을 맡긴 것이다.

- 문재인 정부에 비판도 있지만 한국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는 비판이 여전한데, 국민 신뢰 복안은.

▲집안까리 싸우지 마라는 것이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싸움 소리 안들리죠. 그것이 시작이다. 한국당의 앞으로 실무적 지침 첫번째는 싸워서 이기는 정당이 되자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대안을 얘기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한다. 즉 역량있는 대안정당을 추구한다. 세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국민이 알아서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중흥건설 광주수영대회 건설 부문 공식 후원

선수촌 체력단련실 등 설치 지원

광주지역 대표 건설업체 중흥건설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건설 부문 공식 후원사가 됐다.

광주시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4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중흥건설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건설 부문 공식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용섭 시장, 조영택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로 중흥건설은 대회운영에 필수적인 선수촌 내 체력단련실, 미용실, 식당 등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 중흥건설은 광주수영대회 마크와 국내 스폰서 명칭 사용, 경기장 내 광고 등 중흥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홍보 권리를 부여받게 됐다.

이용섭 시장은 "중흥건설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수영대회가 역대 대회 중 가장 성공해 광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흥건설은 지난 2011년 광주FC에 3억원과 광주문화재단기금 2억원을 기탁하는 등 사회 환원 활동에 앞장서왔다. 중흥건설이 광산구 송정동에 재건축하고 있는 선수촌 아파트는 3월 중 완공 예정이다.

앞으로 약 2개월간 각종 편의시설 등 부대공사를 진행한 후 6월 5일 미디어 구역 일부 개관을 거쳐 7월 5일 공식 개촌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현재까지 광주은행, KT 등 13개 업체와 후원계약을 체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20년 광주시 국비확보 방안 등 논의

민주 시당 오늘 자치분권정책협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당·정 협의 기구인 '자치분권정책협의회'가 15일 광주시청에서 열린다.

이날 '자치분권정책협의회'에서는 2020년 국비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4월 예정된 민주당 중앙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도 준비한다. 또 당·정간 정책협의와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송갑석 시당위원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5개 구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 구의회 의장단 및 주요 당직자들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가 ▲군공항 이전 ▲경제자유구역 지정 ▲CT연구원 설립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 8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송갑석 시당위원장은 "광주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차기년도 정부 예산편성 이전에 당·정간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정과 구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당·정이 협력하고 집중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해가자는 취지에서 정책협의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내년 상반기 완공

도시첨단산단 'D3' 허브 도시로

한국전기연구원(KERI) 광주분원이 내년 상반기 내 완공된다. 호남권 대용량 신재생에너지 전력 변환 등 관련 산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은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9만9000㎡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14일 KERI에 따르면 광주분원은 광주시의 핵심 산업인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산업 육성을 위한 분산전력 및 전력변환 시스템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험인증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도시첨단산단을 국내 최대 규모의 'D3(저탄소, 분산전력, 디지털) + DC GRID(직류 전력망)'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 중추 연구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분원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운영·제어기술,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계·운영,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및 새로운 송전기술 분야로 주목받는 초고압 직류송전(HVDC)용 반도체 변압기 기술 개발 등을 맡아 진행하고, 세계 3대 시험인증 기관인 전기연구원의 시험설비도 갖춘다.

또 ESS 및 태양광 성능 시험동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험 인프라를 마련해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인증시험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ERI의 선진 연구역량 및 우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R&D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국토 서남권 전력 및 에너지 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KERI의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